

연구논문

누구를 위해 얼마나 낼 것인가?: 복지 수혜대상에 따른 납세 의향과 사회적 신뢰의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

임동균** · 양종민***

이 논문은 사회복지 정책의 보호 대상이 누구라고 생각하는지에 따라 시민들의 납세 의향이 어떻게 바뀌고, 사회적 신뢰는 그것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한 논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생애주기의 위험을 겪어 사회복지의 수혜 대상이 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일 때, 우리나라 사람 모두일 때, 혹은 다른 사람들일 경우로 설문에서 제시되었을 때 납세 의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설문 실험 기법으로 조사하였다. 아울러 신뢰를 세 가지 방식(타인에 대한 신뢰, 타인으로부터의 신뢰, 타인 간 신뢰)으로 측정하고, 각각의 신뢰가 어떠한 조절효과를 가지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의 결과, 연금, 실업급여, 그리고 의료보험의 경우, 그러한 사회보장 정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 모든 사람이나 다른 사람이라고 조건이 주어지는 경우보다 자기 자신으로 주어지는 경우 추가 납세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는 타인에 대한 신뢰나 타인 간 신뢰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경우에는 종종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타인으로부터 받는 신뢰는 자기 자신이 복지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경우 특히 뚜렷하게 납세 의향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복지국가 확대를 위한 증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조세 기반 사회보장 체제로의 발전이 필요한 현 시점에서 보다 효과적인 정책수립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함의를 제시한다.

주제어: 사회복지, 신뢰, 노인연금, 실업급여, 의료보험

* 이 논문은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신진연구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7S1A5A8022914).

**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부교수(dongkyunim@snu.ac.kr), 제1저자.

***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연구조교수(jmyang1707@gmail.com), 교신저자.

I. 서론

이 연구는 사회복지 정책을 통해 보호를 받게 되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한 프레임이 어떻게 제시되는지에 따라 개인들의 납세 의향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살펴보고, 사회적 신뢰가 그러한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한국 경제에서 사회복지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선진 산업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에서 복지국가의 확대를 위해서는 증세의 문제를 피할 수 없다. 한국은 국가 주도의 수출지향적 산업화와 경제성장 과정에서 공적복지의 확대를 최소화하고 시장소득 인상을 억제함으로써 노동비용 절감을 극대화하였다. 대신 낮은 조세를 기반으로 개인이 부동산과 금융시장에 대한 투자(혹은 투기)를 통해 사적 자산을 축적함으로써 생애주기에 걸친 사회적 위험에 대해 개인 혹은 가족 단위로 대응하도록 유도했다(김도균 2018; 윤홍식 2019). 따라서 생애주기에 걸친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과 가족은 사적 자산 축적에 매진할 수밖에 없었다.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인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되어 제도적인 차원에서 사회안전망이 갖추어져 있지만, 낮은 포괄성으로 인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낮은 보장성으로 인해 삶의 안정성을 효과적으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삶의 불안정성으로부터 파생되는 불안감은 세대, 계급, 젠더 등 모든 사회적 균열에서 공격적 태도가 생성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회적 위험에 대해 개인 혹은 가족 단위로 대응해야만 하는 각자도생의 사회 혹은 가족자유주의(장경섭 2018)의 사회에서 한정된 자원에 대한 배분을 둘러싼 행위자 간의 갈등은 사회적 신뢰를 낮추고 자신과 다른 집단들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로 이어진다. 가령 한국종합사회조사(Korean General Social Survey, KGSS)에서 “정부는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혜택을 줄여야 한다”는 물음에 대해 반대하는 비율이 2009년에 78.3%에서 2021년에 31.3%로 극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성(김지범 외 2022)이 나타나 충격을 주었다. 생애주기의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이상 사회적 행위자 간 제로섬(zero-sum) 게임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코로나 이후 인플레이션 및 저성장까지 겹쳐 사회경제적 지속가능성이 큰 타격을 입었다.

Shafik(2021)는 생애주기에 걸친 사회적 위험을 개인이 온전히 감당하는 일은 불공평하며 사회 전체가 위험을 분담하는 것보다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하면서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녀는 새로운 사회계약이란 사람들 간의 상호의존성을 인정하고 위험을 공유하면서 전반적인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 시스템을 확립하는 작업이며, 사회적으로 효율적이고 공평하게 위험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연대에 기초한 사회계약으로 사회적 위험에 함께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연대에 바탕을 둔 사회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증세와 시민들의 자세 부담이 필연적으로 요구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는 사회적 신뢰 역시 필연적으로 요청이 된다. 위험을 공동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호혜적 관계에서는 다른 사람들도 자신과 마찬가지로 합당한 수준의 자세를 성실하게 부담하며, 자세를 통해 제공되는 사회적 혜택을 받는 집단은 혜택의 남용으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지 않는지에 대한 인식이 자세 저항성이나 납세 의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결국 연대와 호혜를 바탕으로 한 복지 및 납세에 있어 개인들에게는 ‘누구를 위해서 얼마만큼을 낼 것인가’가 가장 핵심적인 질문 중 하나가 된다. 기존의 연구들은 개인들의 소득수준이나(이선정·김정석 2017; 양종민 2021) 정치적 태도가(Wiedemann 2021; Rehm 2016) 복지를 위한 증세 및 납세 태도에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지 등을 살펴보았으나, ‘내가 복지를 위해 낸 세금이 결국 누구를 위해 쓰일 것인가’라는 질문에 따라 개인들의 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의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문제에 있어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신뢰의 수준이 납세 의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가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신뢰가 자세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연구의 흐름이 있으나(Bergh & Bjørnskov 2014; Roosma et al. 2016), 사회적 신뢰의 개념화와 그 효과의 측정에 있어 더 정밀한 작업이 요청된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증가한 사회적 위험에 공동으로 맞서기 위해 증세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개인 시민들이 공동으로 추가적인 납세를 해서 공동체의 안전망을 기획하고자 할 때, 그러한 사회적 계약은 어떠한 형태로 제시되어야 개인들로부터 가장 적극적인 협력을 얻을 것인가? 롤스(Rawls)의 유명한 사고 실험에 따르면, 개인들이 자신이 어떤 사회경제적 위치로 태어날지 모르는 상태라면, 즉 무지의 장막(veil of ignorance)이 쌓여

있을 때는, 가장 열악한 상황에 태어난 사람들도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유지하도록 해주는 사회계약을 선택하려 한다. 이는 사람들이 어떠한 상황을 가정하고 사회보장에 대한 질문을 받느냐에 따라 그에 대한 대답을 전략적으로 제시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개인들이 세금을 내서 사회복지 정책이 확대되고 그로부터 어떤 개인이 보호를 받는다고 했을 때 그것이 어떠한 프레임으로 제시되느냐에 따라 개인들의 납세 의사는 달라짐을 예상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그러한 정책의 보호 대상이 본인인 되는지,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되는지, 혹은 다른 사람들이 되는지에 따라 추가 납세 의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이 연구에서는 그러한 프레임 효과가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신뢰 수준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살펴보았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복지혜택을 남들이 받는 경우보다 본인이 받는다는 프레임을 접할 때 더 적극적으로 세금을 내려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는데, 사회적 신뢰가 높은 사람들의 경우 타인들을 위해서도 세금을 납부하려는 성향이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사회적 신뢰가 이와 같은 맥락에서 가지고 있는 조절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신뢰 측정을 세분화 하여, 개인의 타인에 대한 신뢰 정도, 개인이 타인으로부터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신뢰의 정도, 그리고 타인들 간의 신뢰의 정도로 보다 세분화 하여 각각의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사회적 신뢰가 복지지출의 확대 혹은 조세부담 의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은 이미 존재하지만, 그러한 연구들은 대체로 개인의 타인에 대한 일반화된 신뢰만을 측정함으로써 사회적 신뢰가 내포하고 있는 다양한 관계적 맥락이 조세부담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밝히지 못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신뢰의 여러 유형이 조세부담 인식과 프레임 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고자 한다.

II. 복지 증세 태도의 결정요인

1. 자기이해와 납세 의향

복지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증세에 대한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

요한 동기 중 하나는 자기이해(self-interest)라 할 수 있다. 소득이 높거나 노동시장에서 안정적인 지위를 가진 집단은 누진세 구조하에서 조세를 통한 복지혜택보다는 조세부담이 더 크기 때문에 증세에 우호적일 가능성이 낮다(Stiers et al. 2022). Beramendi & Rehm(2016)도 비슷한 맥락에서 혜택의 누진성이 높아서 특정 집단(예컨대 저소득층)에게만 혜택이 대부분 제공된다면 공적복지 자체가 한정된 자원을 둘러싼 소득집단 간 제로섬 게임이 되어 복지지출과 복지재정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누가 지불하고 누가 혜택을 보느냐(who pays who gains)가 중요한 것이다. 예를 들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복지예산 확대를 위한 증세에 반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이선정·김정석 2017; 이승주·박소영 2019). 기타 인구학적 특징이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 의향과 가지는 연관성도 자기이해에 기반한 판단을 반영한다. 예컨대, 연령이 늘어날수록 증세에 찬성할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허수연·김한성 2016; 이승주·박소영 2019)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증세에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홍경준·김사현 2018) 또한 그러한 가능성을 시사한다.

자기이해의 효과와 관련해서, 납세에 있어서의 불공정성 인식은 증세 및 복지정책 확대에 대한 태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예를 들어, 손병돈(2016)은 세금부담이 소득에 비례하지 않고 불공평하게 부담하고 있다고 인식할수록 복지증세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김사현(2015)은 조세부담이 불공정하다고 인식할수록 복지지출 확대보다 복지를 위한 증세에 대한 의향이 더 낮은 비용회피적 성향이 강함을 보여준다. 이선정·김정석(2017)의 경우, 임금근로자를 조사한 결과 저소득층에서 조세불공정 인식이 높을수록 복지증세에 더욱 우호적임을 발견하였다. 양종민(2021)은 조세부담 인식구조를 세분화하여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에 대한 조세부담 인식구조를 잠재집단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자산규모와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중산층 과부담형에 속할 가능성이 크며, 이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증세에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이 연구들은 납세, 복지, 공정성 인식은 서로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음을 시사하는데, 그러한 관계의 핵심에는 자기이해에 기반한 판단이 깔려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복지증세의 목적이 복지프로그램의 확대인지 복지예산의 확대인지에 따라 증세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기도 한다. 박경돈(2015)은 복지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증세의 경우 저소득층이나 복지수혜층에게는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를 위한 증세에 찬성할 가능성이 큰 반면, 복지예산 확대를 위한 증세는 일단 예산

을 늘린 다음 복지프로그램에 대한 확대 논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혜자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시민들의 태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 역시 개인들이 자기이해에 따라 섬세하게 납세 태도를 바꾼다는 점을 시사한다.

자기이해와 관련해서 철저하게 객관적인 이해득실의 계산보다는 인지된 사익(perceived interest)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연구들도 있다. 이는 복지지출 확대에 대한 태도와 이를 위한 증세에 대한 태도가 불일치할 때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김사현(2015)은 이 양자 간의 불일치가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 복지지출 확대를 바라면서도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유형으로 소위 ‘넵프(Not Out Of My Pocket; NOOMP)’ 현상이라고 일컬어진다. 또 다른 하나는 복지지출 축소를 지지하면서도 비용부담에는 긍정적인 유형이다.¹⁾ 전자와 관련해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본인이 직접 부담하는 증세를 수반한 복지지출 확대에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들이 있다(김사현 2015; 금중예·금현섭, 2017). 이에 대해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조세부담능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기이익보다는 인지된 사익이 중요해지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있다. 이는 인간은 이익보다 손실에 대해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전망이론(prospect theory)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Kahneman & Tversky 1979).

이러한 논의를 종합해보면, 증세를 위한 추가 납세에 자신의 이해가 어떻게 복합적으로 얹힐 수 있는지는 결국 복지 프로그램이 누구에게 주로 혜택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설문실험 기법을 사용하여 누가 사회복지 프로그램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것인가에 있어 응답자들에게 서로 다른 프레임을 노출시켜, 그에 따라 납세 의향이 달라지는지를 조사하였다. 증세에 대한 태도를 연구하는 데에 설문실험 기법은 종종 유용하게 사용되어 왔다. 예를 들어 양재진·장우윤·윤성원(2021)은 복지지출 확대와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증세의향에 관한 웹기반 설문실험을 진행하였고, Fernandez-Albertos & Kuo(2018)는 응답자의 주관적 계층의식을 물어본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나누어 누진세 선호에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실험연구를 진행했다.

이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복지 프로그램들을 대상으로(i.e., 연금, 실업급여, 의료

1) 김사현(2015: 31)은 전자를 비용회피적 불일치로, 후자를 비용지지적 불일치로 정의했다. 비용지지적 불일치와 관련하여 2013년 한국복지패널자료를 분석한 결과 잔여적(residual) 복지를 선호할수록,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마지막으로 정치적으로 진보적일수록 비용지지적 성향이 강함을 알 수 있다(김사현 2015: 48).

보험), 각 영역별로 추가로 얼마만큼의 세금을 부담할 것인지에 대해 묻되, 응답자를 세 집단으로 나누어, 그 복지프로그램이 누구를 보호하는 것인지에 따라 세금 추가 납부 의향이 달라지는지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이는 앞서 이야기한, 자기이해의 감각이 다양한 요소들과 엮일 수 있는 맥락을 효과적으로 반영하여 그것이 납세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에 유용한 설계라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는 향후 증세를 통해 복지지출 확대를 추진해야만 하는 한국 사회에서 보편복지, 선별복지, 혹은 소득에 비례한 보편복지 등에 대한 시민들의 선호를 파악하는 데에도 의미를 가질 수 있고, 정책적 지지 혹은 정당성 확보 수준이 높은 조세 관련 공공 커뮤니케이션을 기획하는 데에도 의미를 가질 수 있다.

2. 사회적 신뢰의 효과

조세와 증세를 통한 복지국가의 확장은 한편으로는 개인의 이해에 기반한, 계산적이고 전략적인 합리성을 바탕으로 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도구적 합리성을 넘어서는 요소들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복지증세에 대한 태도에 개인의 가치관이나 이념적 요인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호혜성이나 공정성 인식, 개인의 이념적 성향이 복지증세에 대한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Wiedemann 2021, Rehm 2016). 한국 사회의 복지증세에 관한 연구에서는 정치적으로 보수적일수록 증세를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가 있다(허수연·김한성 2016; 홍경준·김사현 2018).

복지국가의 핵심적인 두 가지 목표는 보험의 기능과 재분배이다. 전자는 시민이 실업, 은퇴, 질병 등과 같은 사회적 위험에 직면했을 때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이라면(Barr 2001), 후자는 시장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빈곤과 불평등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사후적으로 자원을 재분배하는 것이다(윤홍식 2021). 물론 보험의 기능과 재분배 기능을 완벽하게 구분하기는 어려우며, 실제로 정책으로 구현되는 과정에서 두 가지 목표가 혼재되어 나타난다. 예컨대,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보험의 경우 소득이나 자산 수준이 낮은 집단이 실업, 은퇴,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보험의 혜택을 받을 기회가 더 많을 수 있으며 보험료 역시 일반적으로 소득에 비례하므로 저소득층이 비용을 덜 부담하고 더 많은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사회보험 내에 재분배의 기능이 내포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결국 ‘누가 지불하고 누가 혜택을 보느냐’의 관점에서는(Beramendi & Rehm 2016) 고소득층은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혜택을 받을 가능성은 낮으므로 국가의 복지 프로그램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지불할 유인이 낮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는 것에는 계산적 합리성을 넘어서는 요인들에 영향을 받아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Rothstein(2001)은 Levi(1991)의 이중 효용 함수(dual utility function)라는 개념²⁾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복지프로그램 유지를 위해 비용을 지불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개인은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동기를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빈곤과 불평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도덕적 의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지프로그램을 위한 비용을 지불한다는 것이다(Rothstein 2001; Habibov et al. 2017).

그런데 개인의 이익과 도덕적 의무감이 긴장 관계를 이루는 과정에서 복지프로그램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특히 신뢰와 관련된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Rothstein 2001: 222). 우선 정부가 제공하기로 약속한 사회적 혜택이 확실하게 제공될 것인가가 문제다. 시민들은 생애주기에 걸쳐 실업, 노령, 질병 등과 같은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국가로부터 제공받고자 하는데, 이 때 정부가 약속한 사회적 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다. 다음으로, 다른 시민들이 자신과 동일하게 복지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성실하게 납세를 하는지 아니면 조세를 회피하거나 부정을 저지르고 있는지에 대한 신뢰의 문제가 있다. 사회보험과 관련하여 도덕적 해이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된다. 실업보험이나 의료보험 등과 관련된 부정수급 사례가 공개되면 일반 시민들은 복지프로그램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고, 납세 의향도 낮아질 수 있다. Habibov et al.(2017)는 타인에 대한 높은 수준의 신뢰가 부정수급 혹은 혜택의 남용에 대한 의심을 줄이고 납세 의사(tax morale)를 높인다고 주장한다. Roosma et al.(2016)도 타인에 대한 신뢰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타인들이 각자 할당된 몫의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더 강하게 가지기 때문에 조세부담 의향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주장한다.

이와 같은 신뢰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신뢰수준과 복지프로그램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적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대표적으로 Bergh & Bjørnskov(2014)는 타인에 대한

2) Levi(1991)는 청년층이 전쟁을 위해 자원입대를 하는 동기에 대해 순전히 이익 극대화(소득 창출)와 순수한 애국심(혹은 의무감)에 바탕을 둔 집단이 일부 있지만 대부분은 이중 효용을 바탕으로 전쟁을 위해 자원입대한다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사회적 이익(social good)과 개인의 이익이라는 두 가지 효용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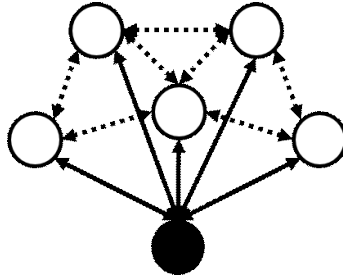
신뢰가 늘어날수록 복지국가의 규모가 커지는 경향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Bjørnskov & Svendsen(2013)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신뢰의 수준이 높아지면 정부 지출 규모 역시 늘어난다고 주장한다. Habibov et al.(2017)은 개인 수준의 분석을 통해 타인에 대한 신뢰수준이 높을수록 조세부담 의향이 높아진다고 주장한다. Roosma et al.(2016) 역시 ISSP(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의 정부의 역할(role of government) 모듈을 분석한 결과 타인에 대한 신뢰수준이 높을수록 조세부담 의향이 높아짐을 밝혔다. 이미숙(2020)은 한국행정연구원의 2019년 사회통합실태자료를 분석한 결과 타인에 대한 신뢰수준이 높을수록 복지증세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됨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타인에 대한 높은 수준의 신뢰는 복지프로그램의 수혜자의 기회주의적 행동 혹은 도덕적 해이와 복지지출 확보를 위한 조세부담 과정에서의 회피 혹은 납세 거부와 같은 부정행위에 대한 의심을 낮추고 다른 사람도 자신과 마찬가지로 복지 프로그램을 정당하게 이용하고 성실하게 납부할 것이라는 믿음을 키움으로써 복지지출 확대나 이를 위한 증세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한다고 할 수 있다.

3. 사회적 신뢰의 다차원성의 문제

그런데 이와 같은 신뢰와 복지태도 간의 관계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사회적 신뢰가 가질 수 있는 다차원적인 측면을 간과하고 있는 점이 있다. 즉 개인수준에서 얼마만큼 타인들을 신뢰하느냐와 관련된 일반화된 신뢰가 있을 수 있고, 사회 전체적으로 얼마만큼 사람들 간에 신뢰의 정서가 흐르느냐와 관련된, 사회 전반적인 신뢰가 있을 수 있다. 조금 더 분석적인 분류를 제시한다면, 개인 자신이 타인들로부터 얼마만큼 신뢰를 받는지에 대한 감각 또한 사회적 신뢰라고 하는 것을 구성하는 요소로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신뢰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대체로 설문 응답자가 ‘대부분의 사람들’(most people)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물어본다. 그동안 신뢰의 효과를 분석한 수많은 사회과학연구들이 보여주듯, 그러한 질문은 매우 큰 유용성이 있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적 신뢰’라는 개념은 더 분석적으로 정교하게 다루어지고 측정될 수 있다. 사회적 신뢰는, 혹은 개인들이 사회적 맥락에서 경험하는 신뢰는, 그러한 대부분의 사람들 즉, 타인에 대한 신뢰 외에 다른 요소들에 의해서도 구성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은 그러한 점을 보여준다.



<그림 1> 사회적 신뢰의 구조

그림에서 아래쪽의 검은색 원은 개인 자신을 의미하고 흰색 원들은 타인들을 나타낸다. 여기서 개인에게 있어 사회적 신뢰는 주관적으로 3가지 구성요소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하나는 개인 자신이 타인들에 대해 가지는 신뢰이고, 다른 하나는 타인들이 개인 자신을 신뢰하는 정도이다. 이는 검은색 원이 흰색 원과 양방향 실선들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다른 한편, 흰색 원들 사이의 양방향 점선은, 개인이 보기에 사회 전체적으로 타인들 간에 어느 정도 신뢰하는 관계를 가지는지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과학분야에서 타인에 대한 신뢰는 일반화된 신뢰로서, 사람들 간의 신뢰는 사회 전반적인 수준의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으로서 개념화되거나 측정되어 왔다. 개인이 타인으로부터 얻는 신뢰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개념화하거나 측정한 연구는 많지 않은데, 조직연구나 경영학에서는 팀이나 회사, 조직에서 팀원들이나 상사로부터 신뢰를 받는 것의 효과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그러한 연구들에서 타인들이 자신을 신뢰한다는 것은 타인들의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인지하는 동시에, 신뢰를 보내는 대상으로부터 배신(exploit)을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들이 기꺼이 그러한 취약성에 노출되고 있음을 인식하는 것으로 논의된다(Lau & Wen 2014). 예를 들어 마카오의 교사를 대상으로 상사(supervisor)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다는 인식을 조사한 Lau & Wen(2014)에 따르면, 상사로부터의 신뢰는 개인의 조직 내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상사로부터의 신뢰를 역이용하여 근무를 덜 성실하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사로부터 신뢰를 받는 교사는 좀 더 윤리적이고 책임감을 가지며 협조적으로 행동한다. 다시 말해, 타인으로부터의 신뢰는 개인의 책임성과 타인과의 연대를 강화시킬 수 있다고 볼 수 있다(Salamon & Robinson 2008).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조직 내에서 상사나 감

독자로부터의 신뢰가 조직원의 업무만족도나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주목하고 있다(Lau et al. 2007; Lau & Wen 2014; Cho et al. 2021). 따라서 특정 조직 차원이 아닌 사회적인 측면에서 타인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다는 인식이 조세 태도와 같은 사회경제적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부재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기존의 설문과 연구들이 위 그림에서의 일부분, 즉 타인에 대한 신뢰에만 주로 집중해왔다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개인이 타인들로부터 받는 신뢰에 대한 인식, 그리고 사회 전체적으로 타인들 간에 어느 정도로 신뢰를 하는지에 대한 인식을 묻는 문항을 설문과 분석에 포함시켜 그것이 납세 의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각각의 신뢰의 종류가 앞서 설명한 복지 혜택의 프레임 효과를 얼마나 강화 혹은 경감시키는지를 보고자 하였다.

III. 자료 및 변수

본 연구를 위해서 2021년 12월에 실시한 <현대인들의 공정성 인식, 정책 선호 및 사회적 태도에 관한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설문 자료는 우리나라 전국 성인들을 대상으로 성, 지역, 연령에 따라 비례할당으로 수집된 1,500명 대상의 온라인 설문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한다. 설문의 핵심 종속변수로는 먼저 복지정책을 위한 응답자들의 추가 납세 의향을 조사하였는데, 복지정책의 대상이 되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납세 의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설문실험을 실시하였다. 설문 응답자 1,500명을 무작위로 500명씩 세 집단으로 나누어, 각각이 서로 약간씩 다른 문항을 받게 하였다. 첫 번째 집단은, “귀하께서는 귀하가 노인이 되었을 때 빈곤에 빠지지 않게 해주는 노후연금 정책을 위해서라면, 귀하 소득의 몇 %까지 세금으로 더 낼 의향이 있으십니까?”라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대한 응답 범주로는 ‘(1) 더 낼 의사 없음 (2) 1% (3) 3% (4) 5% (5) 7% (6) 9% (7) 10% 이상’이 제시되었다.

다음으로, 다른 집단에는 위에서 제시된 문항에서 ‘귀하가’라는 단어가 아닌 ‘우리나라 사람 누구도’라는 표현을 삽입하거나, ‘다른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삽입하여, 각각 ‘우리나라 사람 누구도 노인이 되었을 때 빈곤에 빠지지 않게 해주는 노후

연금 정책’이나 ‘다른 사람들이 노인이 되었을 때 빈곤에 빠지지 않게 해주는 노후 연금 정책’에 대해 얼마만큼 세금을 추가로 납부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항이 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구조의 설문실험을 통해 어떠한 정책 프레임에 따라 시민들의 정책에 대한 태도와 적극적 참여 의사가 달라지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인과 분석의 측면에서 보다 엄밀한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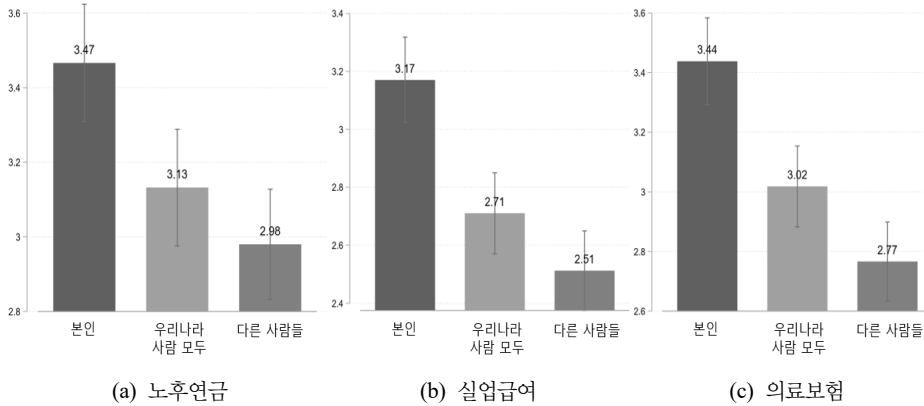
분석에서 독립변수로는 개인들의 신뢰 수준을 3가지 방식으로 측정한 변수들을 주로 활용하였다. 먼저 일반화된 신뢰를 설문을 통해 측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문항인, “귀하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을 신뢰하십니까?” 문항을 활용하여 사람들이 타인에 대해 갖는 신뢰 수준을 측정하였다. 다음으로, 앞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두 가지 종류의 신뢰 수준을 추가로 설문에서 물어보았다. 본인이 타인으로부터 얼마나 신뢰받는지 생각하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 얼마나 서로를 신뢰한다고 생각하는지가 그것이다. 일반화된 신뢰 문항을 구성하는 핵심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일반적으로(*generally speaking*)’와 ‘대부분(*most people*)’이라는 표현을 유지하여, 타인으로부터 받는 신뢰에 대한 인식은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귀하를 신뢰한다고 생각하십니까?”로 물어보았고, 이어서 타인들 간의 신뢰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신뢰한다고 생각하십니까?”로 물어서 측정하였다. 분석에서는 각각의 변수를 개별적으로 분석에 독립변수로 투입하거나, 모두 다같이 투입하여 다른 종류의 신뢰가 통제된 후의 효과를 살펴보는 방식을 택하였다.

신뢰 변수 외에도 연령, 성별, 교육 수준, 혼인상태, 가구 소득 등의 사회인구학적 변수들을 투입하였고, 아울러 본인의 경제적 안정성 인식이 납세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본인 주거지의 계약 형태(자가, 전세, 월세 여부 등)를 통제변수에 포함하였다. 또한, 의료보험이나 노후 연금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개인의 주관적 건강 상태를 통제하였고, 직업 더미들을 추가하여 실업급여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직업의 효과를 통제하였다. 개인의 정치적 성향 또한 통제변수에 포함하였다.

IV. 분석결과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수행한 일련의 분석결과들을 알아보겠다. 먼저 종속

변수인, 복지 대상을 어떻게 설문에서 제시하느냐에 따라 추가 납세 의사가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면 다음 <그림 2>와 같다.



<그림 2> 복지 영역별, 복지 제공 대상에 따른 평균 납세 의향 비교

세 가지 복지 영역의 경우 모두에서 ‘본인’을 잠재적으로 복지의 대상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다른 조건을 주었을 때보다 추가 납세 의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p < .001$). ‘우리나라 사람 누구나’와 ‘다른 사람들’의 두 조건 사이에서는 의료보험 영역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났다($p < .05$).³⁾ 이는 복지정책의 대상자가 ‘다른 사람들’인 것으로 이야기될수록 그에 대한 개인들의 동의와 협조의 가능성이 줄어들 것을 시사한다.

이런 차이는, 사회보험 기반이 아닌, 조세기반 사회복지의 확대를 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이끄는 과정에서 그러한 복지정책이 타인들뿐 아니라, 우리 공동체, 혹은 본인 자신의 생애에 닥칠 수 있는 여러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된다는 것을 강조해야 함을 시사한다. 즉 복지의 프레임이 타인이나 약자를 보호한다는 것보다, 본인을 포함하는 구성원 개개인을 포함한다는 쪽으로 설계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뜻한다. 또한 누가 지불하고 누가 혜택을 보는가의 관점에서(Beramendi & Rehm 2016), 내가 지불한 만큼 혹은 세금을 납부한 만큼 혜택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복지 효능감을 키워줌으로써 시민들로부터 복지 지출 확대와 이를 위한 증세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3) 통계적 유의도는 분산분석(ANOVA) 후 Bonferroni 사후검정을 한 결과이다.

다른 한편, 복지 수혜의 대상에 대한 프레임에 따른 이러한 차이를 줄이거나 늘리는 요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여기서는 사회적 신뢰가 그러한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추가 납세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살펴보았다. 아래의 일련의 분석은 각 복지 영역별 추가 납세 의사의 정도를 종속변수로 삼은 OLS 모델을 활용하여 이루어졌다.

분석에서 조건1은 복지정책과 세금 납부에 있어 ‘귀하가’라는 조건을 받은 집단, 조건2는 ‘우리나라 사람 누구도’라는 조건을 받은 집단, 조건3은 ‘다른 사람들이’라는 조건을 받은 집단을 각각 일컫는다.

반면 신뢰1은 개인이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 가지는 신뢰의 정도, 신뢰2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인을 얼마나 신뢰한다고 생각하는지의 정도, 신뢰3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로를 얼마나 신뢰한다고 생각하는지의 정도를 측정한 변수들이다. 분석에서 세 가지 신뢰 변수들은 모두 평균 중심화를 하였다.

<표 1> 노인이 되었을 때 노후연금 정책을 위한 추가 납세 의향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조건2: 우리나라 사람 모두 ^{a)}	-.318** (.109)	-.307** (.110)	-.305** (.109)	-.303** (.109)
조건3: 타인	-.477*** (.109)	-.474*** (.109)	-.461*** (.109)	-.458*** (.109)
신뢰1: 타자에 대한 신뢰	.019 (.094)			-.188 (.123)
신뢰1*조건2	.217 (.132)			.359* (.176)
신뢰1*조건3	.130 (.136)			.353* (.178)
신뢰2: 타자로부터의 신뢰		.172+ (.099)		.199 (.125)
신뢰2*조건2		-.015 (.135)		-.225 (.176)
신뢰2*조건3		-.143 (.139)		-.315+ (.177)
신뢰3: 타자간 신뢰			.179+ (.097)	.192 (.117)
신뢰3*조건2			.044 (.134)	-.047 (.167)

신뢰3*조건3			-.036 (.138)	-.076 (.164)
연령대(30대) ^{b)}	.135 (.179)	.135 (.179)	.143 (.179)	.126 (.179)
40대	-.095 (.184)	-.086 (.184)	-.082 (.184)	-.103 (.184)
50대	.256 (.189)	.272 (.190)	.279 (.189)	.270 (.190)
60대 이상	.402* (.185)	.418* (.185)	.424* (.183)	.404* (.185)
성별(남성)	.357*** (.105)	.362*** (.105)	.355*** (.104)	.360*** (.105)
교육수준	.014 (.047)	.011 (.047)	.015 (.047)	.017 (.047)
결혼상태(기혼)	-.030 (.122)	-.035 (.122)	-.032 (.122)	-.034 (.122)
가구소득	.056** (.019)	.056** (.019)	.058** (.019)	.058** (.019)
주관적 건강	.033 (.054)	.040 (.054)	.036 (.053)	.023 (.054)
정치적 성향(보수)	-.130* (.054)	-.129* (.054)	-.128* (.054)	-.125* (.054)
주거지 계약형태(2. 전세) ^{c)}	.220+ (.128)	.220+ (.128)	.218+ (.128)	.233+ (.128)
3.월세(보증금 유)	.093 (.139)	.088 (.139)	.097 (.139)	.099 (.139)
4.기타	.242 (.247)	.239 (.247)	.211 (.247)	.212 (.247)
직업 (생략)	-	-	-	
상수항	3.685*** (.540)	3.692*** (.543)	3.655*** (.539)	3.704*** (.542)
사례 수(N)	1,500	1,500	1,500	1,500
R ²	.076	.075	.078	.083

주: 1) 괄호 안은 표준오차를 뜻함. 통계적 유의도는 다음을 표시함: *** $p < .001$, ** $p < .01$, * $p < .05$, + $p <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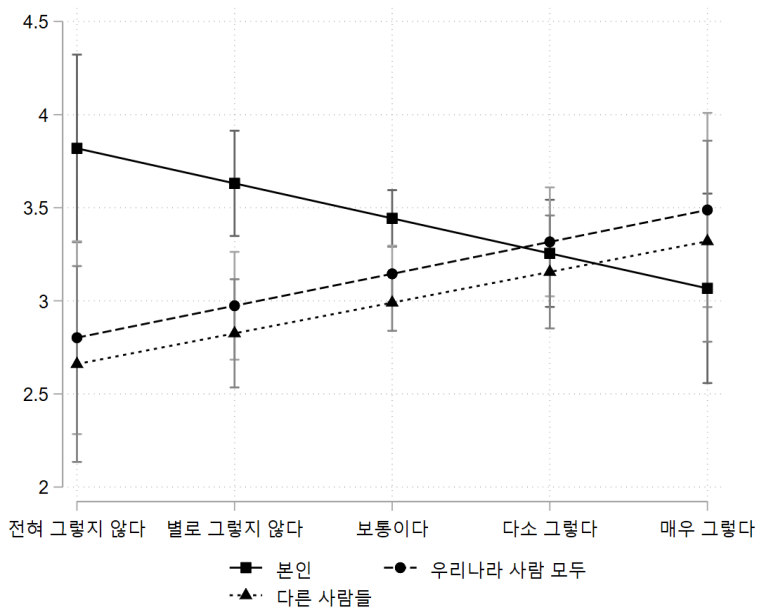
2) 더미변수들의 기준변수는 다음과 같음. a) 조건1: 귀하 본인, b) 연령대: 20대, c) 주거지 계약형태: 1. 자가.

3) 직업 변수들의 효과는 직업 범주들이 많은 관계로 표에서 생략하였음.

<표 1>은 개인들이 노인이 되었을 때 노후연금 정책을 위해 추가적으로 세금을 납부할 의사가 어떠한가에 대한 응답을 예측하는 회귀모형의 결과를 보여준다.

결과를 보면, 우선 회귀표 상단에 나타나듯이, 응답자 본인이 노후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조건(조건1)을 받을 때, 다른 조건을 받을 때보다 더 적극적인 납세 의사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인들 전체나 타인을 고려할 때보다 본인 자신에 대해 고려할 때 세금을 더 납부할 의사가 큰 것이다. 그렇다면, 사회적 신뢰는 그러한 차이를 경감시키는 역할을 할 것인가?

앞서 설명한 세 가지 종류의 신뢰가 그러한 조절효과를 가지고 있는지를 위하여, 각각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가 모형1부터 3까지 되어 있다. 결과에 따르면 일반화된 신뢰, 즉 대부분의 타인에 대한 신뢰의 수준을 포함한 모든 신뢰변수들이 유의한 조절효과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세 가지 종류의 신뢰 변수들을 같이 투입하면서 신뢰 변수들의 순효과를 측정하는 모형4에서는, 개인들의 타인에 대한 신뢰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뢰 수준이 증가할수록, 노후연금이 개인 본인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한국 사람 모두나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인지의 여부의 중요성이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3> 타인들에 대한 신뢰와 노후연금 제공 대상에 따른 추가 납세 의향

이 회귀표에서 나타나는 타인들에 대한 신뢰 수준의 상호작용 효과를 보면 <그림 3>과 같다. 그림에서 X축은 타인들을 신뢰하는 정도, Y축은 세금을 얼마만큼 내고자 하는지에 대한 응답값, 오차막대는 예측 마진(predictive margin)의 95% 신뢰구간을 의미한다.

그림에서 나타나듯이, 타인에 대한 일반적인 신뢰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복지정책, 즉 노인 연금이 본인의 노후와 관련되어 있을 때 추가 납세 의사가 더 유의하게 높지만, 신뢰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그러한 차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일반화된 신뢰’라고 부르는, 일반적인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가지는 친사회적 효과(Nannestad 2008)를 재확인해 주는 것이다. 사회적 신뢰 수준이 높은 사회에서는, 납세의 의도가 본인을 위해서인지, 모두 전체를 위해서인지, 남들을 위해서인지의 차이가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이다.

다음으로 <표 2>는 사람들이 직장을 잃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는 정책을 위해 얼마나 추가 납세를 할 의향이 있는지를 종속변수로 물어본 회귀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이 분석에서도 역시 ‘본인’이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라는 조건이 주어졌을 때 다른 조건이 주어진 경우보다 납세 의향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타인들이 본인을 신뢰한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조건에 따른 추가 납세 의향의 차이가 오히려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2 변수의 상호작용향이 가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계수가 그것을 보여준다.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의 신뢰 수준이 이와 같은 효과를 가지는 것은 예상하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 관계가 <그림 4>에 나타나 있다.

<표 2> 직장을 잃었을 때 실업급여 정책을 위한 추가 납세 의향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조건2: 우리나라 사람 모두 ^{a)}	-.456*** (.101)	-.445*** (.101)	-.448*** (.101)	-.445*** (.101)
조건3: 타인	-.660*** (.101)	-.655*** (.101)	-.648*** (.101)	-.643*** (.101)
신뢰1: 타자에 대한 신뢰	.069 (.087)			-.123 (.114)
신뢰1*조건2	.134 (.122)			.286 ⁺ (.1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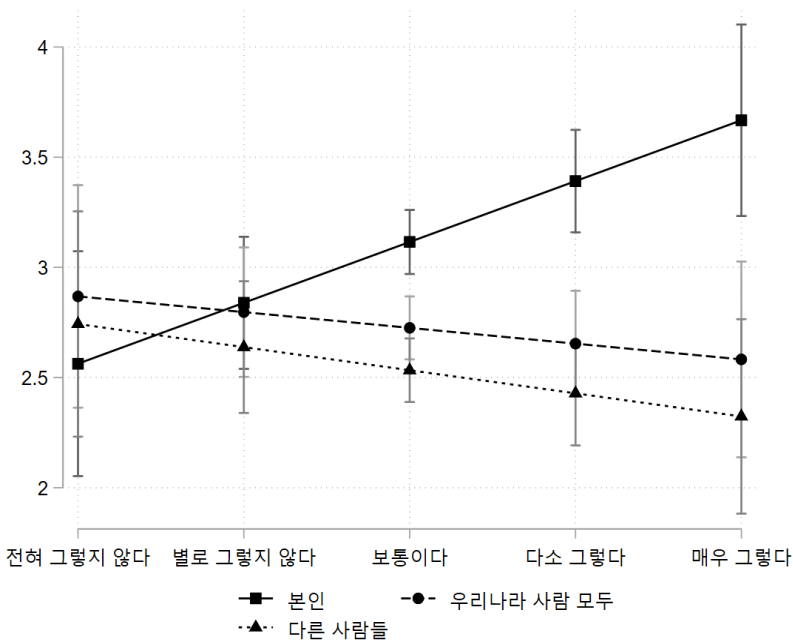
신뢰1*조건3	.070 (.125)			.254 (.164)
신뢰2: 타자로부터의 신뢰		.235* (.092)		.276* (.115)
신뢰2*조건2		-.124 (.125)		-.348* (.163)
신뢰2*조건3		-.201 (.128)		-.381* (.163)
신뢰3: 타자간 신뢰			.137 (.089)	.079 (.108)
신뢰3*조건2			.062 (.123)	.074 (.154)
신뢰3*조건3			.028 (.127)	.073 (.151)
연령대(30대) ^{b)}	-.163 (.165)	-.169 (.165)	-.161 (.165)	-.177 (.165)
40대	-.124 (.170)	-.121 (.170)	-.116 (.169)	-.136 (.170)
50대	.040 (.175)	.054 (.175)	.059 (.174)	.044 (.175)
60대 이상	.112 (.170)	.125 (.170)	.133 (.169)	.106 (.171)
성별(남성)	.398*** (.097)	.404*** (.097)	.395*** (.096)	.401*** (.097)
교육수준	-.029 (.043)	-.031 (.043)	-.029 (.043)	-.025 (.043)
결혼상태(기혼)	-.051 (.113)	-.055 (.113)	-.049 (.113)	-.050 (.113)
가구소득	.015 (.018)	.015 (.018)	.017 (.018)	.016 (.018)
주관적 건강	.095+ (.050)	.101* (.050)	.098* (.049)	.084+ (.050)
정치적 성향(보수)	-.172*** (.050)	-.172*** (.050)	-.172*** (.050)	-.170*** (.050)
주거지 계약형태(2.전세) ^{c)}	.249* (.118)	.253* (.118)	.248* (.118)	.263* (.118)
3.월세(보증금 유)	.007 (.128)	.005 (.128)	.013 (.128)	.014 (.128)
4.기타	.068 (.228)	.064 (.228)	.044 (.228)	.049 (.228)

직업 (생략)	-	-	-	-
상수항	3.708*** (.499)	3.721*** (.501)	3.685*** (.498)	3.744*** (.500)
사례수(N)	1,500	1,500	1,500	1,500
R ²	.088	.088	.089	.095

주: 1) 괄호 안은 표준오차를 뜻함. 통계적 유의도는 다음을 표시함: *** $p < .001$, ** $p < .01$, * $p < .05$, + $p < 1$.

2) 더미변수들의 기준 변수는 다음과 같음. a) 조건1: 귀하 본인, b) 연령대: 20대, c) 주거지 계약형태: 1. 자가

3) 직업 변수들의 효과는 직업 범주들이 많은 관계로 표에서 생략하였음



<그림 4> 본인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신뢰에 대한 인식과 실업급여 대상에 따른 추가 납세 의향

회귀분석 결과에서 나타나는, 타인으로부터의 신뢰(신뢰2)가 가지는 상호작용 효과가 그림에 제시되어 있다. 다른 사람들이 본인에 대해 신뢰를 한다고 생각할수록,

실업급여의 대상을 본인이라고 제시하였을 때 추가 납세에 동의하는 정도가 유의하게 증가하면서, 다른 조건(한국인 전체나 다른 사람들)들을 제시했을 때보다 뚜렷하게 높은 차이가 남을 볼 수 있다. 타인으로부터의 신뢰 인식이 가지는 이러한 효과는 신뢰와 관련된 기존 연구들의 일반적인 결론과 배치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이후에 소개될 결과들과 함께 해석하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의료보험 정책을 위한 추가 납세 의향을 종속변수로 한 분석결과가 <표 3>에 제시되어있다. 여기에서도 복지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납세 의향이 유의하게 차이가 나타났고, 역시 ‘본인’이 질병에 걸렸을 때를 가정했을 때 추가 납세 의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4의 결과를 보면, 세 가지 신뢰 변수의 조절효과가 모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타인들에 대한 신뢰(신뢰1)는 조건에 따른 납세 의향의 차이를 줄여주고, 타인으로부터의 신뢰 인식(신뢰2)은 조건에 따른 납세 의향의 차이를 늘리며, 다른 사람들 사이의 일반적인 신뢰(신뢰3)에 대한 인식은 차이를 줄이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3> 질병에 걸렸을 때의 의료보험 정책을 위한 추가 납세 의향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조건2: 우리나라 사람 모두 ^{a)}	-.428*** (.098)	-.413*** (.098)	-.427*** (.098)	-.421*** (.098)
조건3: 타인	-.686*** (.098)	-.681*** (.098)	-.687*** (.098)	-.680*** (.098)
신뢰1: 타자에 대한 신뢰	.012 (.085)			-.125 (.110)
신뢰1*조건2	.213 ⁺ (.119)			.216 (.158)
신뢰1*조건3	.092 (.122)			.328* (.160)
신뢰2: 타자로부터의 신뢰		.213* (.089)		.337* (.112)
신뢰2*조건2		-.019 (.121)		-.321* (.158)
신뢰2*조건3		-.275* (.125)		-.542*** (.158)
신뢰3: 타자간 신뢰			-.007 (.087)	-.093 (.105)
신뢰3*조건2			.283* (.120)	.313* (.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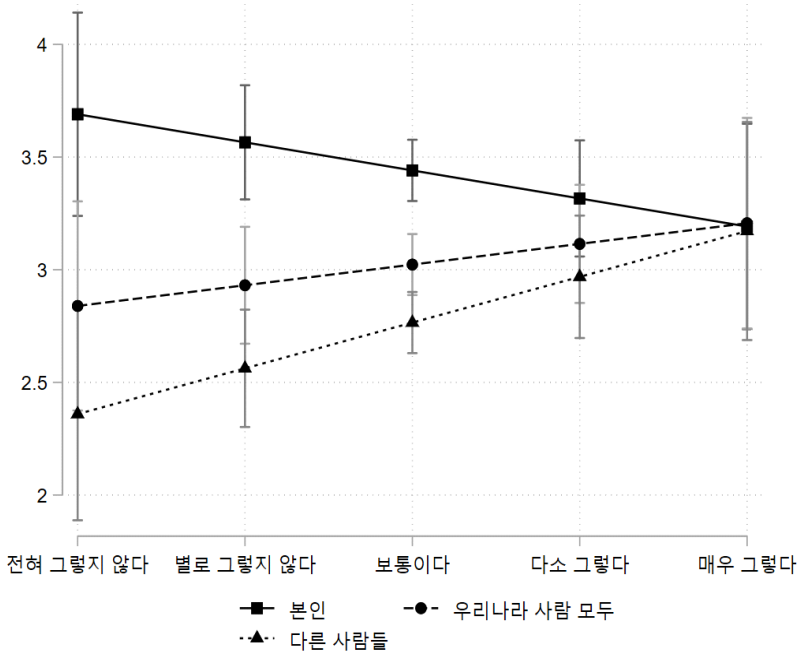
신뢰3*조건3			.070 (.124)	.150 (.147)
연령대(30대) ^{b)}	.066 (.161)	.066 (.161)	.077 (.161)	.060 (.161)
40대	-.151 (.165)	-.141 (.165)	-.132 (.165)	-.148 (.165)
50대	.083 (.170)	.101 (.170)	.107 (.170)	.096 (.170)
60대 이상	.170 (.166)	.180 (.166)	.198 (.165)	.174 (.166)
성별(남성)	.442*** (.094)	.449*** (.094)	.440*** (.094)	.447*** (.094)
교육수준	-.053 (.042)	-.054 (.042)	-.054 (.042)	-.048 (.042)
결혼상태(기혼)	-.173 (.110)	-.183 ⁺ (.110)	-.168 (.110)	-.177 (.110)
가구소득	.041* (.017)	.041* (.017)	.042* (.017)	.041* (.017)
주관적 건강	.062 (.048)	.064 (.048)	.065 (.048)	.048 (.048)
정치적 성향(보수)	-.177*** (.049)	-.174*** (.049)	-.180*** (.049)	-.177*** (.049)
주거지 계약형태(2. 전세) ^{c)}	.266* (.115)	.270* (.115)	.262* (.115)	.280* (.115)
3.월세(보증금 유)	.038 (.125)	.030 (.125)	.041 (.125)	.037 (.125)
4.기타	.107 (.222)	.105 (.221)	.096 (.222)	.101 (.221)
직업 (생략)	-	-	-	
상수항	3.885*** (.486)	3.901*** (.487)	3.867*** (.485)	3.934*** (.486)
사례 수(N)	1,500	1,500	1,500	1,500
R ²	.092	.094	.094	.103

주: 1) 괄호 안은 표준오차를 뜻함. 통계적 유의도는 다음을 표시함: *** $p < .001$, ** $p < .01$, * $p < .05$, + $p < .1$.

2) 더미변수들의 기준 변수는 다음과 같음. a) 조건1: 귀하 본인, b) 연령대: 20대, c) 주거지 계약형태: 1. 자가.

3) 직업 변수들의 효과는 직업 범주들이 많은 관계로 표에서 생략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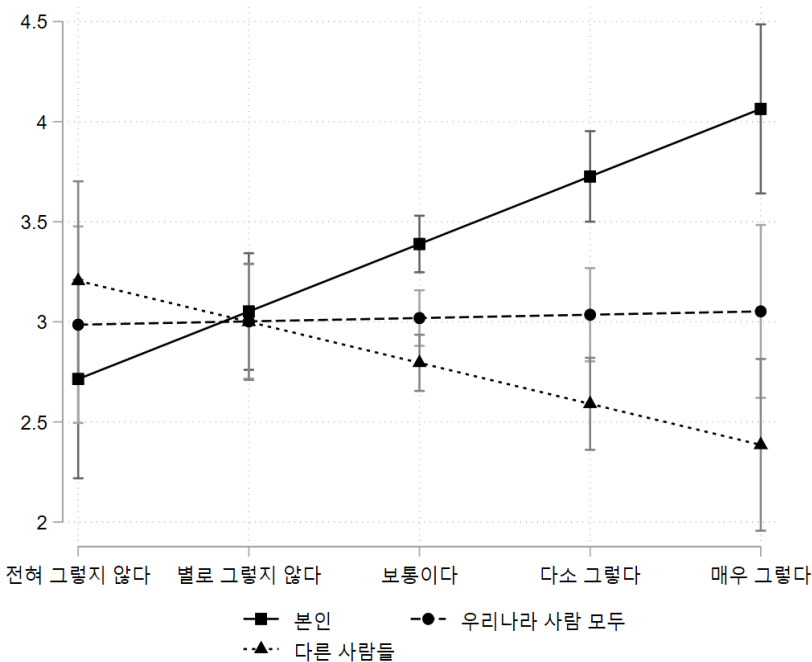
이와 같은 유의한 상호작용 패턴은 다음의 그림들에서 보다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는 개인들이 타인에 대해 더 높은 수준의 신뢰를 가지고 있을수록,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체가 누구인가의 중요성이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신뢰가 증가함에 따라, ‘본인’이 질병에 걸렸을 때 추가로 납세를 하겠다고 하는 정도는 감소하고 ‘다른 사람들’이 질병에 걸렸을 때 추가 납세를 하겠다고 하는 정도는 증가하는 것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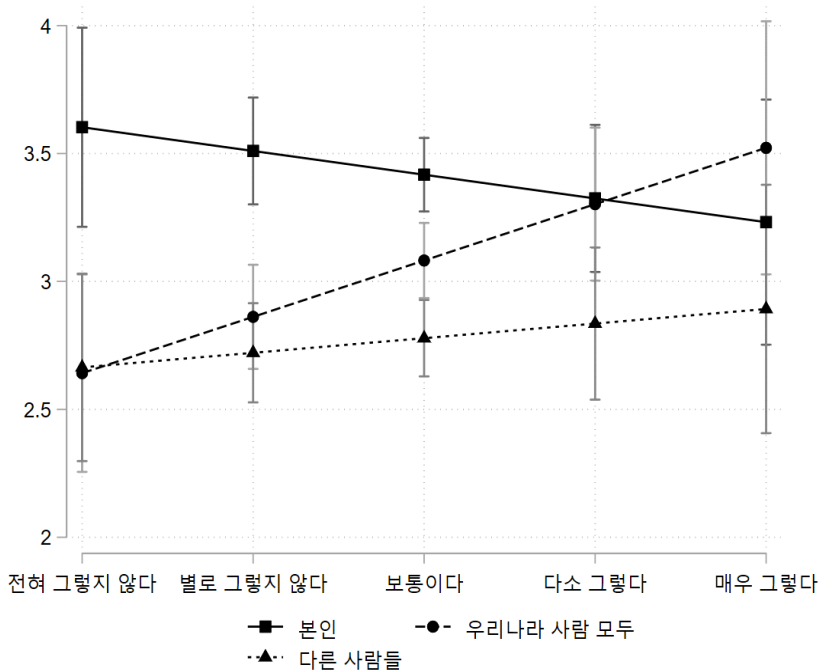
<그림 5> 타인들에 대한 신뢰와 의료보험 제공 대상에 따른 추가 납세 의향

반면 <그림 6>은 신뢰의 정반대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자신이 타인으로부터 신뢰를 받는다는 문장에 적극적으로 동의할수록, 의료보험 제공이 본인에게 이루어 짐을 가정할 때 추가 납세를 하겠다고 하는 정도가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할 때 추가 납세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2>와 <표 3>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효과를 가설적인 수준에서 설명하고자 한다면, 한 가지 해석은 자신이 타인들로부터 받는다고 생각하는 신뢰의 강도가 자기중심적인 (self-regarding) 성향을 일정 정도 반영한다는 것이다. 즉 자기중심적 태도는 자신

이 남들로부터 받는 신뢰의 정도를 과대평가하면서, 복지와 납세를 통해 남들보다 자신이 보호를 받는 것에 더욱 집중하게 만들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자기중심성 가설은 구체적인 사회심리학적 개념들로 보다 정교하게 설명될 필요가 있다. 다른 한 가지 해석은 Shea et al.(2019)의 연구가 보여주듯, 자아(self)의 유지에 있어 모종의 위기나 불안을 느끼는 개인들의 경우, 심리적으로 자아의 보호를 위해 자신의 사회적 관계의 강도를 과대평가하기에 위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러한 개인들은 자신이 타인들로부터 상대적으로 높은 신뢰를 받고 있다고 믿고 싶어하며, 동시에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복지정책을 선호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가설들을 검증하고 확실한 설명이 제시되기 위해서는 타인들로부터의 신뢰에 대한 인식과 다른 사회심리학적 성향들과의 상관을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사회적 신뢰’가 가질 수 있는 이면을 조명하고 있다.



<그림 6> 본인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신뢰에 대한 인식과 의료보험 대상에 따른 추가 납세 의향



<그림 7> 타자들 간의 신뢰에 대한 인식과 의료보험 제공 대상에 따른 추가 납세 의향

<그림 7>은 타인들 간의 신뢰에 대한 인식이 조건에 따른 납세 의향의 차이에 미치는 조절효과를 시각화 한 것이다. 그림에 나타나듯이 타인들 간의 신뢰 정도가 높아질수록, 조건에 따른 납세 의향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특히 ‘우리나라 사람 누구나’로 조건이 주어졌을 경우, 납세 의향이 뚜렷하게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우리 사회의 사람들이 서로를 전반적으로 신뢰하는 정도가 높다고 생각할수록, 즉 사회의 전체적인 사회자본이 높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일수록, 우리 사회 구성원 누구나 의료보험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는 조건이 주어졌을 때 그에 더욱 강하게 긍정적 반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세 가지 복지 영역별로 신뢰 효과의 차이가 나타난다. 우선 타인에 대한 신뢰수준(신뢰1)이 높을수록 노후연금과 의료보험에 있어 수혜 대상에 따른 납세 의향 차이가 줄어들고 있다. 소득과 자산 수준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되지만 가입자 모두가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건강보험과 달리, 혜택의 수준이 기여수준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는 노후연금의 경우 타인에 대한 신뢰가

추가 납세 의사에 있어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손동영, 2015), 타인에 대한 신뢰수준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은 흥미롭다. 반면 실업급여의 경우에는 타인에 대한 신뢰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전국민이 기여 대상이자 수혜 대상인 노후연금과 의료보험과 달리 실업급여의 경우 취업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신뢰가 가지는 효과가 불분명하게 나타난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한편 타자들 간의 신뢰에 대한 인식(신뢰3)이 의료보험을 위한 납세 의사에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질병에 걸렸을 때’라고 제시된 조건이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의 어려운 처지를 조금 더 강조하는 효과를 일으켜, 전 사회적 신뢰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우리나라 사람 누구라도’ 보호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다른 가능성은 의료보험의 경우 부정 수급 및 사용 문제가 좀 더 가시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시민들 간 신뢰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그러한 문제에 대해 덜 경계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반면 자신이 타인으로부터 받는 신뢰에 대한 인식(신뢰2)의 효과는 고용보험과 의료보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고 노후연금에서는 부분적으로 약한 유의도($p < .1$)를 보이는데, 이러한 부정적 효과는 앞서 제시한 사회심리학적 가설들을 통해 그 기제를 추정해볼 수 있으나 그것의 명확한 검증은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밖에 본문에서 강조하지 않았지만 통제변수로 포함시킨 변수들에서도 일부 유의미한 결과들이 제시된다. 복지 영역별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소득이 높을수록, 남성, 정치적 성향이 진보일수록, 거주지 계약형태가 자가인 경우보다 전세인 경우 추가 납세 의사가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이 연구는 사회경제적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사회복지에 대한 대중적 욕구가 지속적으로 커져 온 한국사회에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 공동체 구축의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분석결과들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연금, 실업급여, 의

료보험의 영역에 있어 그러한 사회보장 체제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모든 한국인이나 다른 사람이라고 조건이 주어지는 경우보다, 자기 자신이라고 가정하는 경우 추가 납세 의향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가 향후 특히, 증세를 통한 복지의 확장을 꾀할 때, 사회적 연대나 약자 보호가 중심이 되는 내러티브나 수사보다는, ‘자기 자신’을 생애과정에 있어서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는 방식으로 프레임을 구성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것은 납세 태도와 관련된 기존의 많은 연구결과들이 보여준, 자기이해(self-interest)에 기반한 태도 형성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석결과는 그러한 자기이해 외에도 사회적 신뢰가 그러한 프레임의 효과를 결정짓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함을 보여준다. 즉, 자기 자신이 복지혜택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를 가정했을 때 추가 납세를 할 의사가 평균적으로는 가장 높지만, 타인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높거나 다른 사람들 사이의 신뢰가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 자기 자신이 얻는 혜택에 중점을 두는 정도가 약화되면서, 타인들이 보호를 받는다는 조건을 제시하는 것과 차이가 나지 않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 보면, 보다 확장되고 단단한 조세 공동체의 형성을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들이 어느 정도의 효과를 가질 수 있음이 제시된다. 첫째로, 조세 공동체라는, 위험관리 공동체의 구축을 통해 내가 처할 수 있는 위협으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끔 하고, 둘째로, 사회적 신뢰의 강화를 통해 타인들의 위험 또한 공동으로 관리될 수 있는 것에 더 열려있는 자세를 가지게끔 하는 것이다.

물론 본문에서 나타났듯이 사회적 신뢰의 모든 구성요소들이 위와 같은 친사회적이고 타인지향적인 효과를 가지는 것은 아니었고, 자신이 타인으로부터 신뢰를 받는다고 생각할수록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자신이 타인들로부터 신뢰를 받는다는 감각은 사회적 신뢰를 구성하는 한 가지 요소로서 개념화할 수 있음에도 이와 같은 반직관적인 결과가 나타남은 향후 추가연구를 필요로 한다. 신뢰와 관련하여 이 연구의 다른 한계도 있다. 사회적 신뢰를 다루면서도 제도 및 기관 신뢰, 그리고 조세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본격적으로 분석에서 다루지 못한 문제가 있다. 조세 집행성과 같은 조세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복지증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양종민 2020; 양재진 외 2021)이 있음에도 조세 시스템 관련 신뢰나 제도 및 기관 신뢰가 분석에 포함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복지와 납세에 있어 ‘누구를 위해 얼마를

낼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시민들의 응답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복지공동체 구축의 방법에 대한 부분적인 답을 제시하고 있다. 개인들의 계산적 합리성 그리고 사회적 신뢰 모두를 바탕으로 하는 연대의 사슬을 기획해야 함을 이 연구는 시사한다.

참고문헌

- 김도균. 2018. 《한국 복지자본주의의 역사: 자산기반복지의 형성과 변화》.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 김사현. 2015. “한국인의 복지태도 불일치에 대한 탐색적 연구: 복지지출과 증세에 대한 태도불일치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41(1): 27-57.
- 김지범·강정환·김석호·김창환·박원호·이운석·최슬기·김솔이 2022. 《한국종합사회조사 2003-2021》.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박경돈. 2015. “복지증세에 대한 인식과 영향요인.” 《한국행정연구》 24(3): 91-119.
- 손동영. 2015. “신뢰수준이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 일반적 신뢰가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추가적 납세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 논문
- 손병돈. 2016. “집단간 복지태도의 차이 결정요인: 복지확대 및 증세에 대한 찬성·반대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6(4): 5-34.
- 양재진·장우윤·윤성원. 2021. “한국인의 복지 및 기본소득 관련 증세 태도 연구.” 《예산정책연구》 10(2): 1-28.
- 양종민. 2020. “한국 사회의 복지태도에 대한 연구: 정부의 책임성, 증세, 조세시스템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 68: 79-112.
- 양종민. 2021. “한국 사회의 조세부담 인식구조에 대한 연구: 소득, 자산, 부채의 영향을 중심으로.” 《경제와사회》 132: 168-207.
- 윤홍식. 2019. 《한국 복지국가의 기원과 궤적 3》. 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 윤홍식. 2021. 《이상한 성공: 한국은 왜 불평등한 복지국가가 되었을까?》 서울: 한겨레출판.
- 이미숙. 2020. “개인의 가치관과 사회인식이 복지증세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행정논집》 32(4): 741-758.
- 이선정·김정석. 2017. “복지증세태도에 대한 소득수준별 조세불공정인식의 차등적 효과.” 《한국사회학》 51(3): 117-137.
- 이승주·박소영. 2019.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이 증세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 연구.” 《지방정부연구》 23(2): 153-173.
- 장경섭. 2018. 《내일의 종언?: 가족자유주의와 사회재생산 위기》. 집문당.
- 허수연·김한성. 2016. “한국인의 복지태도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32(3): 203-235.
- 홍경준·김사현. 2018. “노동대중의 균열: 위험지위와 복지태도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45(2): 67-94.
- Barr, N.A. 2001. *The Welfare State as Piggy Bank: Information, Risk, Uncertainty, and the Role of the State*. Oxford University Press.
- Beramendi, P. and P. Rehm. 2016. “Who Gives, Who Gains? Progressivity and Preferences.”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49(4): 529-563.
- Bergh, A. and C. Bjørnskov. 2014. “Trust, Welfare States and Income Equality: Sorting out the Causality.”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35: 183-199.
- Bjørnskov, C. and G.T. Svendsen. 2013. “Does Social Trust Determine the Size of the Welfare State? Evidence Using Historical Identification.” *Public Choice* 157(1): 269-286.
- Cho, J., P. Schilpzand, L. Huang, and T. Paterson. 2021. “How and When Humble Leadership Facilitates Employee Job Performance: The Roles of Feeling Trusted and Job Autonomy.” *Journal of Leadership & Organizational Studies* 28(2): 169-184.
- Fernández-Albertos, J. and A. Kuo. 2018. “Income Perception, Information, and Progressive Taxation: Evidence from a Survey Experiment.” *Political Science Research and Methods* 6(1): 83-110.
- Habibov, N., A. Cheung, and A. Auchynnikava. 2017. “Does Trust Increase Willingness to Pay Higher Taxes to Help the Needy?”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Review* 70(3): 3-30.
- Kahneman, D. and A. Tversky. 1979. “On the Interpretation of Intuitive Probability: A Reply to Jonathan Cohen.” *Cognition* 7(4): 409-411.
- Lau, D.C., J. Liu, and P.P. Fu. 2007. “Feeling Trusted by Business Leaders in China: Antecedents and the Mediating Role of Value Congruence.” *Asia Pacific Journal of Management* 24(3): 321-340.
- Lau, D.C., L.W. Lam, and S.S. Wen. 2014. “Examining the Effects of Feeling Trusted by Supervisors in the Workplace: A Self-evaluative Perspective.”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35(1): 112-127.
- Levi, M. 1991. “Are There Limits to Rationality?” *European Journal of Sociology*

- /Archives Européennes de Sociologie 32(1): 130-141.
- Nannestad, P. 2008. "What Have We Learned about Generalized Trust, If Anything?"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11: 413-436.
- Roosma, F., Van W. Oorschot, and J. Gelissen. 2016. "A Just Distribution of Burdens? Attitudes toward the Social Distribution of Taxes in 26 Welfare States."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28(3): 376-400.
- Rothstein, B. 2001. "The Universal Welfare State as A Social Dilemma." *Rationality and Society* 13(2): 213-233.
- Salamon, S.D. and S.L. Robinson. 2008. "Trust That Binds: The Impact of Collective Felt Trust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3 (3): 593.
- Shafik, M. 2021. *What We Owe Each Other*. Princeton University Press. 미노슈 샤프크 (2022). 이기적 인류의 공존 플랜 21세기를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 이주만 역. 까치
- Shea, C.T., J. Lee, T. Menon, and D.K. Im. 2019. "Cheater's Hide and Seek: Strategic Cognitive Network Activation During Ethical Decision Making." *Social Networks* 58: 143-155.
- Stiers, D., M. Hooghe, S. Goubin, and M.S. Lewis-Beck. 2022. Support for Progressive Taxation: Self-interest (Rightly Understood), Ideology, and Political Sophistication. *Journal of European public Policy* 29(4): 550-567.

<접수 2022.08.05; 수정 2022.08.05; 게재확정 2022.08.24>

How Much to Pay for Whom?: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Trust on Willingness to Pay Tax for Welfare Provision

Dong-Kyun Im

(Seoul National University)

Jongmin Yang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how citizens' intention to pay taxes changes depending on who they think are mainly protected by social welfare policies,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trust. Using a survey experiment method, we investigated how survey respondents' willingness to pay taxes changes when the beneficiaries of social welfare were 1) themselves, 2) all Koreans, or 3) other people. In addition, social trust was measured in three ways (i.e., trust in others, trust from others, and trust among others), and what moderating effect each trust had was examined. Results show that in cases of pension, unemployment benefits, and medical insurance, people showed the highest levels of willingness to pay taxes when they were given the scenario in which individuals themselves are protected rather than all Koreans or other people are protected. However, this difference was sometimes not significant when individuals have high levels of trust toward others or their perceptions of trust among others were stronger, suggesting that social trust is associated with pro-social attitudes. However, perceptions of trust from others was often found to have opposite effects than other types of trust. This study provides implications for how to make more effective tax policies when tax increases for expanding the welfare state and the development of a tax-based social security system are needed.

Key words: social welfare, social trust, old age pension, unemployment benefits, healthcare